

쟁점 1 ~ 10

| | | |
|--------------------------------|---------------------------|--|
| 1. 간접손실보상 | 의유성법요 | |
| 간접손실보상의 의미 | 시뵤필내소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사업시행지내의 토지소유자가 입은 부대적 손실과 구별 |
| 간접손실보상의 유형 | 소진일 지구변 최강 | 소음 진동 일조침해 등 물리적 기술적 손실과 지역경제 사회적 구조가 변경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있다. 최근 판례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 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보아 피수용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 간접손실보상의 성격 | 후재생 | 손실이 있은 후에 행하는 사후적 보상의 성격, 보상의 내용으로는 재산권 보상으로 볼 수도 있다. 침해가 있기 전의 생활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대물보상과 함께 생활보상의 성격도 갖는다. |
| 간접손실보상의 법적근거 | 헌수특 예특의일 |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하나, 수산업 협동조합사건에서 간접적인 영업손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으로서 예견가능성,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예특이 있다면 의도적인 침해로 볼 수 있는 점, 헌법23조3항이 공용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손실보상규정인 점에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 밖특보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간접손실이 발생할 것, 특별한 희생의 발생, 보상규정의 존재 |
| 특별한 희생 | 사제형실 |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발생여부는 형식설과 실질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식설은 인적범위의 특정성 및 한정성, 실질설은 침해의 본질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칙64조) | 배23 / 진단그부사휴불 / 청편 / 발갈동환 | 배후지의 3분의2 이상이 상실되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 영업자의 청구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지구내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 / 영업보상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 보상금을 환수 |
| 보상법률주의 2018두227 [1] | 재공수정법규위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시행결과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 영업손실보상의 특성 2018두227 [1] | 동설가원시다 | 공익사업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다. |
| 토지보상법상 규정 해석 2018두227 [1] | 기1 그부사추일영특 | 법 79조 2항 손실보상 기한을 사업완료일이 아닌 사업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점 칙 64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을 규정한 것은 간접손실로서 영업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
| 손보+손배 동시 행사 가능 여부 2018두227 [2] | 별손이선 | 근거 규정과 요건 ·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별개의 청구권이다.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 |
| 손보기간 도과 손해청구 가능성 2018두227 [2] | 배요 |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 재결전치주의 2018두227 [3] | 34 50 비 83 85 곧 | 34조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 상대방 2018두227 [4] | 잘재 관취 사보 |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소를 제기하여야 |
| | | |
| | | |
| | | |
| | | |

[illegible]

| | | |
|---|------------------|--|
| 3. 수용재결무효확인, 보상금 공탁, 수용재결의 실효 | | |
| 수용재결의 의의 | 수결최판 |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불성립 불능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관할 토수위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 결정의 최종적 판단절차이다.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 |
| 공탁제도의 의의 | 사재보관공보달 실행사피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재결의 실효 방지 사전보상원칙의 실현 및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취지가 인정된다. |
| 수용재결의 실효 | 유객상 |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의 효력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 사전보상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
| 수용재결의 실효사유 | 보사 |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재결 이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사업인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 고시 결과에 따라 재결의 효력은 상실된다. |
| 수용재결 실효와 재결신청 효력 | 수일백환 |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
|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두64241 | 보임입벌 |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하여 보상금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
| 소결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으로써 승계취득) | 승최입현 |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으로써 승계취득이 가능한 점, 최소침해의 원칙을 관철, 토지보상법 제1조의 입법취지, 재산권 보호의 요청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헌법23조의 취지 |
| 수용재결무효확인 구할 실익 2016두64241 | 무판소회 무회다 |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 4. 수용권 남용 2009두1051 | 재불최현 공비수 공반남 |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5. 공익성 검토 21조상 사업인정 요건에 대한 중 토위의 공익성 검토 | 4의절 공기자재능목지대 피방시 | 형식적 심사: 4조(사업의 적격성), 의견수렴 절차 및 사업시행 절차(사전절차의 적법성) 실질적 심사: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 시행목적 공공성, 사업의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 유형, 사업재원의 공공성, 사업수행능력, 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공익의 지속성, 시설의 대중성 수용의 필요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
| 6. 재결신청청구권 | 의요효권위 | |

